

“미시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해 나갈 것”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된지 2년 ... 미시경제 정책의 총괄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을 만나 그 동안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글 | 이근영 _ 한겨레신문 기자 kylee@hani.co.kr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와 함께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2년의 성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범부처적인 협의·조정'이 1순위로, 'R&D투자 확대와 R&D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가 2순위로 꼽혔습니다. 둘 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업무인 셈인데요, 혁신본부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계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짧은 기간 안에 혁신본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2년 전 출범 당시만 해도 비관적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개 부처 공무원과 19명의 민간인으로 이뤄진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기획·조정과 평가 및 예산)을 담당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난하게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룬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그리고 R&D 예산 조정기능을 확립하여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확고히 정착시켰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 2년 연속 부문별 최고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아울러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확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 이른바 먹거리 창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여 DMB, Wibro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말 COEX에서 '미래 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높아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과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혁신본부에 R&D 예산의 조정·배분권을 부여한 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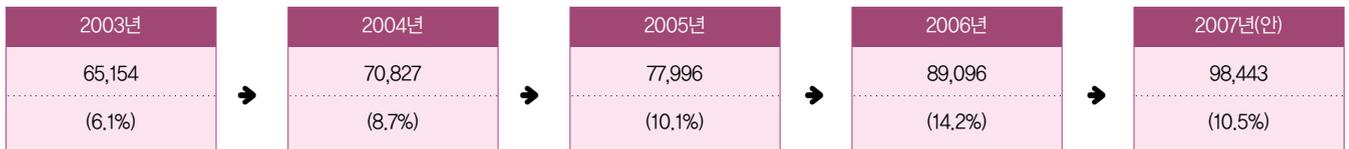
지난해 핀란드 기술청(TEKES)에서는 향후 한국이 세계 R&D 분야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OECD는 올해초 발표한 '성장을 향한 경제개혁' 보고서의 연구개발 혁신성과 평가에서 우리 나라를 미국,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선두권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지난 6월초 미국 RAND연구소에서 발간된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보고서에서는 29개의 분석 대상국 중 한국을 미국, 독일 등과 함께 '과학 선진국' 그룹의 7개국에 포함시키고 지식경제지수 기준 7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EU와 이탈리아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에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58%)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는 알고는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해 따로 묻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총리체제 및 혁신본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신지요?**

지난 10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 2년을 맞이하여 일반국민,

〈정부 R&D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조직으로 출범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시점에서 혁신본부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어떠한지요?**

외국에서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체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의 정책조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과학기술계 전문집단, 공무원 집단 등 3개의 부류로 분류하여 설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93%) 및 공무원(80%) 집단은 인지도가 높은 편인 데 비해 일반국민의 인지도(42%)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과학기술부의 업무특성상 대국민 접촉기회가 비교적 적은 데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과학기술부가 하는 일을 브로슈어, 팸플릿, 홍보책

자 발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반 국민에게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2005년 11월, 2006년 9월)를 비롯해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 우주인선발, 물리·화학의 해 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홍보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2년간 새로운 행정체제의 안정, 과학기술 정책의 현안 조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추진 등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 연계된 인력·산업·지역혁신 정책현안의 발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가 R&D 투자 효율성제고는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앞으로 그간 구축된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시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 예로,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등 새로운 과학기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R&D 재원 배분구조의 선진화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성과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기자 브리핑, 인터넷을 통한 정책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우수 혁신사례를 모아 알기 쉽게 기술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2월 1일 '제2회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해 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미래 기술발전의 전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R&D 예산이 10조원 시대에 돌입해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투입에 비해 성과가 아직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R&D 예산 조정·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전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R&D 조정체계, 즉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R&D 예산의 조정·배분 및 성과평가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에 과학기술부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종합 조정·기획·평가의 중심부처로 재설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R&D 예산·기금의 조정·배분 체계를 정착시키고 성과 중심의 국가 R&D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국가 R&D 예산·기금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조정·배분하여 투자 효율화를 꾀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였으며, '연구성과평가법'을 제정(2005년 12월)하여 R&D 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그 결과를 R&D 예산 조정·배분과 향후 사업구조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대형 연구시설, 장비사업 등을 조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투자 효율 제고 노력을 본격화해왔으며, 국가 R&D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논문,



〈 특정평가 결과 〉

구 분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사업수 (비중)	50개 (100%)	3개 (6%)	18개 (36%)	27개 (54%)	2개 (4%)	0 (0%)

특히, 시제품 등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연구 성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지난 8월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 관련 정보시스템을 관계부처·기관간에 종합 연계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 보완하여 R&D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가 공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도 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특정평가를 받는 50개 사업 중 2개만 미흡(D) 판정을 받았을 뿐 96%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을 낚는 부분인데, 이런 점을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 총 238개 평가 대상 중 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 사업 등 각 부처의 주요 50개 사업을 특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50개 평가대상에 대해 기획·집행·성과 등 전 영역에 걸친 사업별 평가와 함께 부처간 역할분담, 사업간 연계 등을 고려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0개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대형 R&D사업의 추진타당성을 점검하여 사업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5단계 평가등급을 도출하는 한편,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및 민간겸용기술 등 5개 분야별 평가를 통하여,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분야와 지원방식 등에 대한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공동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등급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96%가 ‘보통’(C)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정평가 대상 사업이 주로 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의 각 부처 대표 사업으로서 부처가 그 기획과 관리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

이는 사업들임을 고려할 때,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번 성과평가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혁신본부는 금번 평가에서 드러난 미비점 중 많은 부분을 2007년도 예산 조정·배분 과정에서 보완한 바 있으며, 부처 협의 및 조정 계획 수립 등 그 보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그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기혁신본부는 앞으로도 성과지표의 계량화, 우수 등급 부여기준의 강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2007년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전체의 R&D 종합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각 부처 R&D 사업의 기본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연구성과 평가의 잣대로 SCI 논문 편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계에서는 양적인 평가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평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량화가 중요하겠지만, 질적 평가를 위한 엄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올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논문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학술지 영향지수(IF), SCI급 학술지계제 논문건수 등을 도입하였으나, 학술지 Impact Factor의 경우 기술분야별, 연구자별 피인용 빈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11월말 완료 예정인 표준성과지표의 보완 과정에서 논문의 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도 평가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06년 표준성과지표 보완시 논문 한편 당 피인용 횟수, 분야별 평균 인용률 등의 질적 지표를 추가하고, 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사업별로 질적 성과지표를 핵심지표로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술지 Impact Factor의 기술분야별 보정 활용

방법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 과학기술부가 <사이언스> <네이처> <셀> 등 3대 저널만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선배 과학자들은 물리학의 <피지컬 레터>처럼 분야에 따라서는 이들 저널만큼 중요한 학술지들이 있음에도 젊은 과학도들이 이들 3대 저널을 선호하는 왜곡현상이 벌어진다고 걱정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과학기술부는 세계 3대 저널인 '네이처', '사이언스', '셀' 지 등에 논문을 발표한 우수과학자에게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저널 중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종합학술지로 세계 과학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셀' 지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우수저널로 과학기술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언스'의 경우 매년 1만2천 편 이상의 최고 수준의 논문이 제출되지만, 실제 게재비율은 8% 미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뿐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서 대단한 영예이며, 따라서 3대 저널을 선호하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왜곡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3대 저널 외에도 분야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2004년부터 10개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어떤 분야가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지요?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102인치 PDP, 512M PRAM, 지상파 DMB 송수신기, 휴대인터넷 WiBro 등 세계적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2006년 6월)와 DMB 본방송 서비스(2005년 12월) 등으로 일부 분야에서 연구성과의 조기 산업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이 원칙적으로 2008년에 마무리되는 관계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이후의 성장산업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 R&D사업 토털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는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후속사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과학기술 국채발행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2천25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계획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회수해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1천432억 원은 산자부와 해수부 등 타부처 출연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환계획이나 부처간 상환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신지요?

지난달 개최된 2006 세계지식포럼의 화두가 '창조경제'였듯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성장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사회의 선두를 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기술투자의 주된 수혜자인 미래 세대가 어느 정도 상환부담을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채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에 출연·용자·출자라는 다양한 형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 국채발행 첫해로서 기술료를 회수하여 국채를 상환하는 출연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출연사업은 축소하고 용자·출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은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로 펀드를 결성하여 전문투자회사가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체제로 추진하여, 그 동안 정부가 투입해서 이루어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면서 수익을 제고하여 국채상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과학기술부가 재원의 배분·관리에 주력하고, 사업은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산자부와 해수부 등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채 상환계획 등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칙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임상규 본부장은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다시 서울대 행정학과에 들어가 74년 졸업한 다음해 행시 17회로 체신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미국 시리큐스대에서 경제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조사과장, 총무과장, 공보관 등을 거쳐 예산실장을 맡았다. 2004년 1월 과학기술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며, 같은해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취임했다.

◆ 지난해 6월부터 경제·산업계, 학계·연구계 등을 망라한 '과학기술혁신정책협의회'를 꾸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과학기술혁신정책협의회는 비공식협의체로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산업 인력·지역혁신 정책 등에 대해서 산·학·연·민·관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계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6월 첫모임을 가진 이후 격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삼성종합기술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협의회를 가졌고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LG경제연구원에 이어 지난 8월에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산·학·연·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관계 부처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연계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시책' 등 정책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윤대희 연세대학교 부총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박성주 KAIST 교수, 임형규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세(주)이노디자인 대표이사,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백만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박형식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광경택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 주로 예산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과학기술부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004년 1월 과학기술부 차관에 임명된 것까지 고려하면, 참여정부에서 최장수 각료로 꼽힐텐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과거의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예산처를 거치면서 28년여간 예산·경제기획·정책조정·물가·공정거래 등의 업무를 폭넓게 담당해 오면서 경제전반을 거시적으로 보고, 정부 전체 예산을 종합조정·편성하는 데서 쌓아온 경험과 인간관계가 과학기술분야 전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혁신본부의 핵심기능인 종합기획·조정 및 평가, 예산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에서 공학(금속공학과 졸업)을 전공한 경험도 업무상으로 생소한 분야인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구성 자체가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고, 하는 일이 각 부처를 조정·평가하는 업무여서 특히 '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매일 호프데이를 열고 영화도 함께 보는 등 관계를 중시한 덕에 2년을 대과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업무를 하게 된 데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항상 정도를 걸어왔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어진 업무와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㉓